

[기고] 철강산업과 탄소배출, 균형 잡힌 시선이 필요하다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2024년도 전국 대형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에 따르면,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TMS(굴뚝원격감시체계) 기준으로 가장 많은 배출량을 기록했으며, 전남 전체 배출량의 65% 이상이 광양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으나, 단순한 수치만으로 지역과 기업을 평가하거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제철소의 대기오염물질 및 탄소 배출량은 조강 생산량과 공장 규모에 비례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광양, 포항, 당진은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수십 년간 국가 경제를 지탱해온 산업 기반이다. 특히 광양제철소는 TMS 설치 굴뚝 수가 40개나 증가해 모니터링 기준이 더 엄격해졌음에도, 2024년 총 배출량은 전년 대비 약 1,300톤 감소했다. 이는 포스코가 지난 6년간 약 2조4,000억 원에 달하는 환경 투자를 지속해온 결과로, 숫자 너머의 노력을 조명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포스코는 ‘수소환원제철’이라는 획기적인 기술 전환을 추진 중이다. 이는 석탄 대신 수소를 환원제로 사용해 철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탄소배출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친환경 기술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전환은 수조 원대의 장기적 투자가 요구되며, 정부의 전략적 지원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맥락을 외면한 채 배출 수치를 단편적으로 나열하거나 지역 오염도 순위를 매기는 방식은, 해당 도시의 환경 수준을 오도하거나 시민들에게 과도한 불안을 줄 수 있다. 현재 철강산업은 글로벌 공급 과잉, 원자재 가격 급등, 미국의 고율 관세 등 삼중고 속에서 치열한 생존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현실에서 제철소의 안정적 가동과 산업 경쟁력 유지야말로 국가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다.

산업은 결코 환경과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기업의 자율적인 감축 노력은 물론,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시민 사회의 균형 잡힌 시선이 함께해야 한다. 철강산업의 친환경 전환이 본격화되고, 수소 기반 기술이 결실을 맺는 그날까지, 우리는 산업을 응원하고 기술 혁신을 뒷받침하는 분위기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2025년 6월 30일

광양상공회의소 회장 우 광 일